

보수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표지면지



■ 개회사

추 경 호 여의도연구원 원장

■ 축 사

정 우 택 자유한국당 당대표권한대행  
김 중 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토론회

좌장

박 재 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발제

1. 영국 보수당의 교훈 ————— 1  
| 박지향 서울대학교 교수
2. 공론민주주의의 시대와 보수이념 정당의 길 ————— 11  
|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前총장
3. 한국 보수가 가야할 방향과 과제 ————— 25  
|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토론

1. 강규형 명지대학교 교수 ..... 43
2. 김인영 한림대학교 교수 ..... 46
3. 권순환 동아일보 前논설위원 ..... 53



## 개회사



**추 경 호**  
여의도연구원 원장

반갑습니다. 여의도연구원장 추경호입니다.

오늘 『보수가치 재정립 연속 토론회』 첫 번째 시간으로 ‘보수의 미래를 디자인하다’는 주제로 귀한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사 좌장을 맡아주신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재완 이사장님 그리고 발제자로 나서주신 서울대 박지향 교수님, 한국교원대 김주성 前 총장님, 나라정책연구원 김광동 원장님, 토론에 참여해주신 강규형 교수님(명지대), 김인영 교수님(한림대), 권순환 동아일보 前 논설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여행보험사 직원 허버트 하인리히가 수많은 사고를 분석하며 얻어낸 이른바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한 번의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그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해주는 29번의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300번의 징후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당한 대형 참사 즉 20대 총선·19대 대선 패배를 이 관점에서 보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잇따른 총선·대선 패배는 그동안 한국당이 수많은 징후를 외면하고 안이하게 국정을 운영해온 결과 ‘올 것이 온’ 대형 참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대선 결과는 내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 또다른 대형 참사를 경고하는 또 하나의 징후일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대한민국 보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수는 지난 반세기 산업화와 민주화를 선도하며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뛰어난 정책역량은 보수의 힘이자 한국경제 신화를 이루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수가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뼈를 깎는 당 혁신과 보수 재건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면 앞으로 10년, 20년 ‘보수 大빙하기’가 우려되는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보수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수·진보 양 날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여의도연구원은 보수 가치 재정립과 보수 재건을 위한 실마리를 우리 시대 집단지성을 통해 풀어가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 박지향 교수님께서 ‘영국 보수당의 교훈’을 짚어주시고, 김주성 前 총장님께서 ‘보수이념 정당의 길’을 분석해주시고, 김광동 원장님께서 ‘한국 보수의 발전과 미래’에 대해 전망해주시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보수가치 재정립과 보수 재건을 위한 첫 단추가 꿰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의도연구원은 보수 지식인과 시민단체 등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우리 시대 보수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찾아가는 ‘보수재건의 큐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23일

여의도연구원 원장 **추 경 호**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권한대행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정우택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5월9일 대선이 끝난 지 이제 50일이 다 돼 갑니다. 비록 지난 대선에서 '보수정당'은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보수유권자'들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계파갈등과 분당사태의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뼈아픈 혁신과 개혁을 행하였고, 그 결과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오명을 뒤집고 보수결집과 적통보수정당으로서 재건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을 통해 보수층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한편으로는 2040세대로 대변되는 청년들과 수도권·호남으로부터 외면당하는 한계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2040세대들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정책이나 전략 등을 통해 수권 능력을 인정받는 정치역량을 보여드려야 할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통렬한 '성찰'과 진정성 있는 '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수의 기본은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입니다. 과거를 제대로 반성하고 과거에서 제대로 배워야 보수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개혁 없는 보수는 죽은 보수입니다.

우리는 수권정당으로서 '헌법질서의 가치를 분명히 정립'하고, '진정성 있게 지키는(保守) 당'이 돼야 합니다. 보수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한 걸음씩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정치를 실현함으로써, 보수가 기득권을 자처하는 정당이 아닌 '보수이념과 가치'를 사수하는 이념정당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 정부여당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제1야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헌법가치를 보호하며 이를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투쟁할 수 있는 역동적인 야당으로 탈바꿈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의도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최로 마련된 '보수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토론회는 이런 우리에게 아주 시의적절한 방향과 대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좌장을 맡아주신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님, 발제를 맡아주신 박지향 교수님, 김주성 교수님, 김광동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으로 참석해주신 강규형 교수님, 김인영 교수님, 그리고 권순환 前 논설위원님께서도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기탄없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명하신 교수님들과 언론인 그리고 시민사회 보수지식인들이 함께하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나아가 한국 보수의 미래를 위한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23일

자유한국당 당대표권한대행 **정 우 택**





**김 종 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종석 의원입니다.

먼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모색하기 위한 오늘의 의미 있는 토론회에서 축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신 여의도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은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아 압도적인 표차이로 패배했고, 내부는 분열되었습니다. 총선에 이은 대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자체평가도 부족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며 번영을 이끌어 온 보수 세력의 대표라 불리는 자유한국당이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정당이라 자임해왔던 자유한국당이 진정한 보수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1야당으로서 구심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수의 위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며,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지금이야말로 보수정당이 새롭게 태어나야 할 때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깊은 성찰과 혁신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강단을 가지고 설득력 있는 보수의 가치와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진정한 보수는 낡은 수구보수가 아닙니다. 건전한 보수, 포용하는 보수, 미래지향적인 젊은 보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보수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토론회를 열고, 보수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동시에 보수재건을 위한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한국 보수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발제를 맡아주신 박지향 교수님, 김주성 교수님, 김광동 원장님과 토론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수는 진보와 함께 사회를 지탱하는 양 날개입니다. 보수의 몰락은 나라의 불행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서로 건강한 양 날개를 가질 때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학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저명인사들을 모시고 진행되는 오늘의 토론회를 계기로 무너진 보수의 축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와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저도 오늘 토론 내용을 토대로 보수의 내일을 함께 고민하고, 통합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여의도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23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 종 석**

보수가치 재정립 연속토론회 I  
보수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 발제 1

## 영국 보수당의 교훈

박지향 서울대학교 교수



# 영국 보수당의 교훈



- I. 보수주의 원칙
- II. 디즈레일리의 업적
- III. 대처혁명
- IV. 성공의 비결

## 보수주의 원칙



- 1. 관념적, 이상적 원칙이 아니라,  
현실과 구체적 삶에 기초한 역사 인식  
인간 본성과 이성에 대한 불신
  
- 2. 사회는 유기체 : 각기 다른 기능  
사회적 위계질서 => 엘리트의 공을 인정  
엘리트: 능력, 노력, 성실, 책임의식

## 보수주의 원칙

3. 역사와 전통에 대한 시각  
인간은 사회적, 역사적 존재  
기존 제도를 존중  
'애국심' 이 최고의 미덕  
변화를 수용



에드먼드 버크 (Edmund Burke)

“변화할 수단을 갖지 않은 국가는  
보존을 위한 수단도 없는 법”

그러나 점진적 변화 : 급진적 개혁은 모두를 고통  
으로

디즈레일리의 연설 (1867)

“변화는 진보하는 나라에서 불가피합니다.

변화는 꾸준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불가피한 변화를 거부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변화가 관습과 법과 전통과 양식에

걸맞게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추상적이고

자의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수행될

것인지입니다.”

## 능력주의

사회는 ‘유기체’ = 구성원들이 서로 관계 속에 있다  
는 말

노력과 근면은 자신의 몫, 그러나 재능은 많은 부분  
타고 난 것

능력주의. 그러나 더 나아가 약자에 대한 보살핌이  
필요

‘공정한 게임의 법칙’

## 불평등의 옹호

모든 보수주의자를 결속시키는 하나의 원칙

“완벽한 평등은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내  
아이들 농장에서 키울 때에야 이를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조차 아이들 사이에 내재한 차이를 없앨 수  
없을 것이다”

불평등이 당연한 이유

평등은 매우 모호한 개념

“정의롭지 못한 어떤 것을 수정하기 위해  
또 다른 정의롭지 못한 짓을 저지르는 것에 반대”

## 기회의 평등

따라서 기회의 평등 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조건의 평등 ...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단,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해야  
실력주의  
'불평등해질 권리'



영국 국민의 상당수가 불평등에 대한 보수당의  
주장을 지지

##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사회주의의 차이

이성과 합리성

사회계약설, 사회유기체설

재산권

자유, 질서, 권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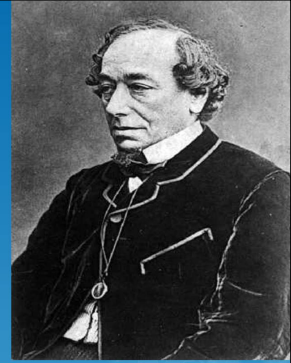
권력, 특히 국가 권력

애국심

시장경제



## 디즈레일리의 업적



최초의 유대인 출신 수상

‘하나의 국민’ 보수주의의 기초 마련

‘두개의 국민’ 을 ‘하나의 국민’ 으로

‘오두막이 행복해야 궁전도 안전하다’

보수당의 비전을 제시

애국주의, 대영제국, 국민 생활수준 향상

대중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게

기존 지지세력을 유지한 채 새로운 지지세력 확보

## 마거릿 대처 이전의 영국, 1945-1979

비대해진 국가

1) 케인즈 식 혼합경제

2) 완전 고용

2% 이하의 실업을 => 강력한 노동계

‘누가 영국을 통치하는가’

3) 복지국가

나태, 무책임, 의존문화

‘영국병’

## 대처혁명

경제적 자유주의  
통화 안정과 인플레이 치유  
작지만 강한 정부  
기업가 정신

사회적, 도덕적 보수주의  
자립과 자조  
법과 질서의 존중  
애국주의



## ‘하나의 국민’ 보수주의 비판

1945년 이후 ‘하나의 국민’ 파가 강해짐  
마거릿 대처

“사회 같은 건 없다”

캐머런: 개인과 공동체의 수렴

“사회 같은 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와 다르다”



## 보수당 성공의 비결

1. 결속 [cf. 자유당/노동당]
2.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
3. 국가 경영 능력, ‘통치에 적합한 당’ 이미지
4. 국민의 당, 애국 정당
5. 조직과 선전



## 21세기의 과제

‘국민의 당’ 이미지의 약화  
세계화와 다양한 정체성  
지역 차  
세대 차

1979, 1983, 1987년 선거에서는  
35세 이하에서 다수가 보수당 지지

궁극적으로 ‘승리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해내는 정당’





보수가치 재정립 연속토론회 I  
보수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 발제 2

### 공론민주주의의 시대와 보수이념 정당의 길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前총장





## 공론민주주의의 시대와

## 보수이념 정당의 길

김주성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 1. 건국 산업화 시대와 보수정당의 無이념성

“한국정치에 있어서 보수, 우익으로 ‘불리우는’ 정치, 사회세력은 존재하면서도 스스로 유지, 보수하려는 대상이 되는 ‘현실’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이 왜 유지, 보수되어야 하는가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체계적인 이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념적 빈곤상태, 또는 이념적 빈곤성 자체가 왜 문제되는지 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이념적 자의식의 결여상태가 존속해왔던 것이다.”(양승태, 1995.)

## 1.1 이중모순에 빠진 민주화 이전의 자기배반적 보수정당

- **존재모순** : 지켜야 할 것이 존재하지 않는 모순
- **수행모순** :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지켜야 하는 모순

한국의 보수세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이전에 먼저 그것을 수호해야 하는 허구적인 역사적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역사적인 임무는 권위주의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보수세력은 있어도 보수이념은 없었다.’



### 1.1.1 건국세력의 연성권위주의

---

**국가이념 : 자유민주주의**

**통치이념 : 반공권위주의**

---

- 국가건설과 체제수호의 성공 : ‘독립의 꿈’ 국가건설, 농지개혁, 전쟁수행, 한미상호방위조약, 교육혁명
  - 성공의 위기(1960)
- 

### 1.1.2 산업세력의 경성권위주의

---

**국가이념 : 자유민주주의**

**통치이념 : 개발권위주의**

---

- 경제발전과 시민사회형성의 성공 : ‘잘살아보세’ 경제건설, 민족적 자신감회복, 수출주도형 산업국가건설, 중산층 형성
  - 성공의 위기(1987)
-

## 1.2 과연 보수정당은 무이념적이었나

---

### 1.2.1 건국보수의 정치적 자유주의

---

-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자유선거 실시
  - 일당 우위체계의 3권 분립 운영
  - 교육혁명(민주시민 교육)
  - 농지개혁으로 산업사회의 기반조성(필리핀, 남미의 지주과두제)
- 

### 1.2.2 산업보수의 경제적 자유주의

---

- 1963년 제5차 개헌: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제111조 1항 신설)
  - 1972년 제7차 개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헌법전문에 처음으로 천명)
  - 경제개발로 민주사회의 기반조성(중산층 형성)
-

### 1.2.3 당시 보수이념의 특성

---

- 자유민주주의이념의 존재론적 불완전성
  - 자유민주주의이념의 목적론적 불확실성
  - 형식적 존재와 실질적 부실 사이의 소극적 내면화
  -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진보성
- 

### 1.3 민주화시대 보수정당의 이념성

---

- 선거민주주의의 완성(2008)  
=> 정치관계3법의 선진화, 선거공영제,  
TWO-TURNOVER TEST, FULL DEMOCRACY
- 명실상부한 자유민주주의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명실상부한 지배이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했다.” (강정인, 2008)

---

## 1.4 정치경쟁시대의 보수와 진보

---

보수와 진보진영의 현대정치제도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라 정치갈등이 심화되었다. 보수진영은 현대정치제도를 자유주의, 공화주의 및 민주주의가 혼합된 것으로 이해했지만, 진보진영은 주로 순수민주주의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다. 보수진영의 정치내용은 자유주의적 가치와 공화주의적 가치를 신장하는 것이고, 진보진영의 정치내용은 주로 참여민중의 이익을 확대하려는 것이었다.

---

## 2. 민주시대의 보수정당과 정체성 위기

## 2.1 이명박의 실용정부

---

- 광우병 촛불집회 / 천안함 폭침사건
  - 소극적 보수정치
  - 역사전쟁 방치
  - 70년대식 밀어붙이기 4대강 사업
- 

## 2.2. 박근혜의 보수정부

---

- 전교조의 범외노조화
  - 통진당의 해산
  - 역사전쟁 부진(때늦은 국사의 국정화)
  - 70년대식 3개년 경제개발계획
-

## 2.3. 보수정당의 정체성 위기

---

- 위험에 빠진 자유적 가치와 공화적 가치
  - 보수리더십의 실패
    - 정경유착의 70년대 정치의식(시장개입주의)
    - 소통부재의 리더십(구시대적 권위주의)
    - 정책과 인물 승계의 거부(이명박 정부의 정치유산 거부)
    - 빨셈정치(공천파동)
  - 3.10 대통령 탄핵: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율권 침해  
=> 헌정수호의지가 의심받아
- 

## 2.4. 보수존립의 최대 위기

---

- 보수의 정치력 고갈
    - 언론권력의 광폭행진과 대통령사과의 역효과
    - 촛불민심의 폭발과 집권정당의 분열(교각지세?)
    - 태극기 집회와 김평우 변론의 착시현상
    - 하야의 마지막 기회와 구심점의 상실
  - 보수의 정치자원 고갈
    - 2013.1 여론조사: 보수40% 진보24%
    - 2017.5 대선득표율: 보수2당 30.79% 진보3당 69.21%
-

### 3. 공론민주주의와 보수이념 정당의 길

★ 공론민주주의 :

- 언론의 문자공론장과 SNS의 구술공론장의 융합  
(사유지향의 일방향 소통과 행동지향의 쌍방향 소통)
- 정당이념은 가치와 비전과 이미지의 융합

▲ 과거 정당민주주의시대 - 계급성/지역성 중요

▲ 최근 공론민주주의시대 - 이미지와 소통성 중요

### 3.1. 보수가치의 재정립

---

- 자유가치 (인권/재산)
  - 공화가치 (공익/준법)      ★ 세 가지 가치의 균형
  - 민주가치 (소통/공론)
  
  - 안보능력과 경제능력
  -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 

### 3.2. 보수비전의 재구축

---

- 미래비전 (미래산업, 미래세계, 미래동북아)
  
  - 개혁비전(현실적인 개혁이 진정한 개혁: 사회는 실험실이 아니다)
  
  - 멀리 너그럽고 가까이 단호한(원교근공)의 외교전략  
(베트남 벤치마킹)
-



### 3.3. 보수 이미지 개선 – 진보전략 벤치마킹

- 진보프레임 극복, 보수프레임 구축

- ※ 진보프레임 : 반공=반민족, 건국세력=친일, 산업화세력=군부독재
- ※ 보수프레임 : 공7과3의 근현대사, 건국·산업화세력=민주사회 기반조성, 북한 및 종북=반민족·전체주의

- 후계자 키우기와 정치선배 기념하기

- 덧셈정치 (보수연합 또는 보수통합)

- 도덕재무장 (도덕적 청결성,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부와 봉사)

- 정치적 희생정신 (박근혜의 결백주장/노무현의 살신성인)

### 3.4. 이념정당과 인물정당

• 영국보수당 벤치마킹

- 9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이끈 ‘각각 다른’ 보수당

- 메이저 총리(시골악단의 아들, 대처후임의 47세 총리)

- 캐머런 총리(39세 당대표, 43세 총리, 블레어의 계승자로 불림)

• 7080의 정치의식에서 벗어난 소통의 새 인물

=> 국제감각을 갖춘 매력적인 젊은 인물을 찾아야



보수가치 재정립 연속토론회 I  
보수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 발제 3

한국 보수가 가야할 방향과 과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 한국 보수가 가야할 방향과 과제

김 광 동 (나라정책연구원장)

한국보수가 직면한 최대 문제는 자기 정당성의 상실과 지향 가치의 불명확성에서 오는 것이다. 보수 리더십의 재구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스스로에 대한 정당성 상실은 자신감의 결여는 물론이고 활동력 부재 및 조직 확산 부재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론 허구적 정당성에 입각하여 활동하는 세력들을 합리화시키는 간접적 결과까지 만들기도 하다. 가치지향성과 관련해서는, 보수는 ‘도 대체 지향하는 것이 뭐냐?’ ‘왜, 우리가 지지해야 하나?’라는 상시적 의문의 당사자가 됨에 따라 정책대안에 대한 혼란과 대국민 설득력에서 심각한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미래의 책임있는 주역이 되고 국민선택을 받기 위한 실천 활동이이란 차원에서 보수 및 보수정당이 가야할 지향 가치와 그에 따른 정책 대안, 그리고 보수조직의 활동과제를 중심으로 몇가지 사항을 제기하고자 한다.

### I. 역사 정당성과 계승

보수의 본질은 만들어온 것에 대한 자부심과 계승적 발전의 당위성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된다. 보수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면 70년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정당성과 계승을 명확해야 하고,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근대 문명개화를 주도적으로 시작하며, 조선시대의 봉건체제의 극복, 일제 식민체제의 극복은 물론이고, 공산 전체주의와 맞서 민주공화제를 만들고 근대 문명번영체제인 대한민국을 건설해온 주도세력으로서의 자부심과 계승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1870년대 이후 전개된 문명개화(文明開化)투쟁의 결과로 자주독립되고 근대 문명을 건설해온 140년 역사의 연속선상에 있다. 반봉건-반식민-반공산의 길을 확고히 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폐쇄적 봉건체제, 군국주의적 식민국가, 남들은 경험하지 못한 냉전시대에 열전을 이겨내고 공산전체주의 위협에 맞서온 한국 보수는 반봉건-반식민-반공산의 주역이면서도 ‘한강의 기적’과 ‘떠오르는

용'이란 평가로 세계의 모든 신생독립국 및 개발도상국이 가야할 모델을 만들어 세운 주역이다. 문명개화와 자유번영국가를 향한 헌신적 지향과 투쟁의 연장선에서 선 보수는 그 역사적 기원과 정당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목숨을 던지며 근대 문명개화를 주도해온 김옥균, 유길준, 서재필, 이승만, 이상재, 김구, 김성수, 조만식, 조병옥, 박정희 등은 물론이고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등으로 이어지며 근대문명을 한반도에 만들어 세우고자 했던 가치집단이고 이를 계승하는 세력이다.

계승할 역사에 대한 자기 긍정과 정당성이 흔들리고 명확하지 않은 세력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없다. 자기 정당성에 대한 혼란은 역사인식의 부재와 만들어진 것에 대한 인식 부재에서 온 것이면서도 '민족' 및 '민주'가치를 중심으로 한 외적 공격에 대한 굴복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결과는 북한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 자유민주와 번영의 가치를 내걸며 역할해야 하는 책임감과 자신감의 상실로 나타나며, 작게는 동일한 지역감정과 관련된 것도 특정 지역은 '민주의식'이고, 또다른 특정지역은 '지역감정'이라는 왜곡된 틀을 받아들이는 원인이 된다. 마찬가지로 시장을 개척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부도덕하다고 규정하는 반면, 각종 투자리스크와 고용을 창출해내는 기업을 뜯는 일부 '시민단체'는 오히려 도덕적이고 공익적인 것처럼 만드는 사회, 혹은 중국의 자유유린과 독재체제 혹은 100만 군을 투입시켜 통일을 막고 분단을 영구화시킨 중국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지 못하며, 대신 중국 '굴기'만을 말하는 사회를 도래시켰다. 그에 따라 대한민국 가치에 반하거나 전체주의 동조활동을 막는 것이 자유 수호와 민주주의 확립 투쟁임에도 그것을 게을리하거나, 심지어 그런 활동 때문에 '반민주'세력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유야무야 받아들이는 원인이기도 하다.

자신들의 선배들이 만든 문명사적 모델국가의 성격을 모르는 보수 구성원들이 거의 태반이상이고 무엇을 계승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역사적 정당성 인식에서 활동력과 호소력이 나올수 없다고 본다. 특히 한반도에 보편가치를 지향하고 구현해온 한국보수의 핵심가치는 물론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가치에 맞춰지는 것은 당연하다. 대한민국이란 구체적 공동체를 통해 인류 보편가치가 가장 완성도가 높게 구현되는 나라를 만들고 그 모델이 세계인의 이정표가 되도록 만드는 것에 기여한다는 인류보편적 정당성도 분명해야 한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보수는 인류 보편가치를 향한 국제협력과 동맹, 그리고 보편가치에

반하거나 보편가치를 유린하는 체제를 대상으로 한 체제변화를 주도하는 소명을 실현하는 주역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해야한다.

## II. 민족가치와 구현 방향

민족가치는 보수가치의 핵심으로 흔들릴 수 없는 것이다. 민족주의적이라 것은 보수에 대한 영광의 표현이었고 1945년 이후 <민족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대변되어온 민족의 미래를 닦는 양대 세력의 본산이다. 변영된 일류국가의 이상을 버리지 않는 한, 그리고 북(北)에 있는 민족절반이 반민족세력에게 점령당해 노예와 같이 사는 상황에서 한국 민족주의는 결코 낡은 것이 될수 없다. 민족주의가 낡은 것처럼 비춰졌다면 그것은 새로운 미래지향적 가치체제로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민족끼리'처럼 민족주의가 마치 좌파진보의 선전도구가 된 것도 보수가 민족주의에 대한 정립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국보수는 민족가치의 지향점과 실천방향을 명확해야 한다. 물론 그 방향은 첫째, 대한민국의 변영의 지향과 위상 제고이다. 둘째는 노예상태에 있는 2천 5백만 우리 민족에게 자유와 변영의 삶을 누리게 만드는 제2의 광복(光復)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위상 제고와 변영된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은 보수가 지향하는 기본방향이고 그것에 보수의 목표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시켜내야 한다. 한국의 삶의 질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것은 민족적인 것이면서도 세계적인 것이다. 한국이 만들어낸 모델과 제도를 세계인이 함께 하거나, 한국이 만든 <Made in Korea> 제품이 세계인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은 민족주의와 배치되지 않는다. 보수는 지난 70년간 그런 과제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실제 전세계가 관심있는 것도 '한국이 어떻게 변영국가가 되었느냐?'하는 것이다. 국방을 튼튼히 하고 세계적인 기업들을 키워내고, 민족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며 변영국가를 만들어온 주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미래과제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해야한다.

둘째로, 한반도 북부에 있는 2천 5백만 민족에게 자유와 변영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민족 맞이한 최대 급박한 과제이다. 1945년 해방과 광복은 한반도 남쪽인 대한민국에서만 이루어진 것이고 여전히 한반도 북부는 전체

주의와 공산제국주의의 일원이 되어 자주도, 자유, 기본권도 없이 남아있다. 전체주의적 노예상태에 있는 민족 절반을 대상으로 해방(解放)투쟁과 광복(光復)투쟁이란 흔들릴 수 없는 보수의 가치이자, 헌신의 대상이다. 이등박문을 향한 안중근의 저격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민족 인권을 짓밟고 민족을 파멸로 이끌어간 전체주의 독재세력을 대상으로 한 투쟁은 고귀한 것이자, 보수의 당면 과제이자 책임임을 명확히 하며 구체적 실천이 분명함으로서 문명파괴와 민족유린을 만든 공산전체주의와 투쟁하고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가져다주는 희생과 헌신을 한국 보수는 영광으로 알아야 한다.

그런 기본방향과 헌신해야할 진정성있는 가치가 흔들리면 오히려 ‘민족 파괴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으로부터 ‘반민족’집단으로 역공당하게 마련이고, 그게 실제 오늘의 현실이다. 또한 ‘민족’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진보좌파가 공산전체주의 독재를 대상으로 ‘남북대화’ ‘교류와 협력’ ‘대북 지원’ ‘정상회담’과 ‘평화체제 추진’ 등을 천연덕스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도 대부분 보수가 전체주의 독재를 대상으로 한 감연한 투쟁을 하지 않고, 진보 프레임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반전체주의, 반공산투쟁’ ‘북한 광복투쟁’을 저버렸거나 스스로 부끄럽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 누리는 것에 대한 자족으로 가야할 과제를 포기했거나, 또는 반민족적 세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공격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위협감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조선노동당과의 대결구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에 동조하는 2중대, 3중대들에게 시달릴수 밖에 없다.

### Ⅲ. 민주가치와 구현 방향

한국사회에 가장 허구적 논리는 소위 ‘민주’세력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출발은 봉건과 식민체제를 뚫고 최초로 자유민주적 선거와 헌법제정을 거쳐 1948년 민주공화제적 건국이다. 대한민국 건국의 위대함과 건국 민주주의의 혁명성을 인식하지 않게 되면서 보수 기반이 무너져온 것이다. 오히려 혁명적 민주공화제를 시작한 한국 민주주의에 가장 위협적이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거나 붕괴시키고자 해온 세력은 바로 공산주



의 세력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온갖 ‘민주와 민족’이란 선전용어를 독점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 민주주의 투쟁의 본질은 공산전체주의와 싸워온 세력이다. 공산 전체주의와의 투쟁에 가장 많은 희생을 치뤄야했다. 서유럽에서는 의회를 만들자, 선거권을 달라, 여성도 투표하자는 것이 민주주의 투쟁이었다면, 그 모든 것을 도입시켜 시작시킨 한국에서의 민주투쟁이란 6.25전쟁을 포함, 만들어 놓은 민주공화제를 지키고 유린당하지 않는 반공산, 반전체주의투쟁이었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는 반공투쟁이 승고한 민주투쟁이었음을 확고히 해야한다.

마찬가지로 세계 어느 민주주의도 국가안보 및 안정과 사회경제적 번영을 토대로 하지 않은 민주주의이 성숙은 없다. 국가안보와 민주주의는 분리될수 없는 것이고, 사회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는 분리된 나라도 없다. 확고한 국가안보를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졌고, 세계적 유래가없는 사회경제적 번영을 통해 민주주의 토대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곧 자유민주세력의 본연의 역할이다.

1987년 제6공화국의 민주주의 성숙도 바로 확고한 국가안보와 냉전의 완화, 그리고 한국의 확고한 경제사회적 번영의 토대로 있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 지금부터 우리 민주주의 하자!’라고 해서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는 없다. 민주주의란 경험의 누적과 시행착오를 통한 점진적 발전과 성숙의 결과인 것이다. 모두가 전세계 모든 국가의 지난 1백년의 역사를 다시 보면, 국가안정과 질서가 잡혀있지 않은 나라에 민주주의란 단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번영에 기반하지 않은 안정되고 성숙한 민주주의란 어느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보수는 봉건식민제를 이어받아 민주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이란 민주공화제를 만들어 세우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주주의가 더 성숙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기반을 착실히 만들어 쌓아올렸다면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 발전의 본령을 담당한 것이다.

#### IV. 자유 가치에 입각한 정책 지향

한국 보수의 자유(自由)란 핵심가치를 명확히 하고 자유에 기반한 정책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자유 가치가 어느덧 때 묻고 낡은 것처럼 된 것은 스스로

모호하게 망설였거나 자유가치에 연계된 정책 구현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유는 국민 각 개인에게 자유선택을 가능하게 만든다. 체제와 제도를 선택하고, 직업과 종교를 선택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고, 정당과 지도자를 선택하고 지향하는 가치의 충족을 위해 선택할 자유를 보장한다. 그 결과로 자유선택은 다양성을 만들고, 개방체제를 지향하게 한다. 개방적 사회를 유지하지 않고는 선택은 제한되거나 유린된다. 그런 면에서 자유시장이란 자유가치 실현의 정당한 체제이기도 하다.

자유는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다. 선택이 있기에 선택받으려는 정당한 자유경쟁이 가능해지면서 사회는 발전하고 풍요로워진 것이다. ‘내가’ 오늘 어떤 영화를 볼 것인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영화제작사를 경쟁시킨 것이고, ‘내가’ 점심에 먹고 싶은 음식점을 선택했다는 것은 식당들을 경쟁시킨 것이다. 그런 자유선택은 정당에 대한 선택에서부터 제도 및 정책과 법률의 선택까지 적용되는 것이다. 명확한 것은 경쟁체제란 내가 자유선택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나의 자유선택을 위해 경쟁체제는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경쟁이 없는 곳에는 자유선택도 없다. 그런 면에서 자신은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남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경쟁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경쟁하지 않겠다는 것은 남의 선택권과 자유를 빼앗겠다는 것이고, 정의에도 반한다.

자유와 관련된 보수의 정책과제로 본다면, 우리사회에서 펼쳐지는 공공영역 확대와 성과주의(merit) 시스템의 거부야말로 국민 자유와 선택권의 박탈이다. 공공영역이란 독점적 기반위에 있는 것이다. 전력회사나 검찰을 선택하고, 교사나 학교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오늘도 공공부문에서 성과주의를 배제하고 성과급은 환수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지급하겠다는 사회적 기세가 높다. 공공부문은 그 자체가 독점이고, 그 종사자들은 제한된 경쟁을 하는데 성과급제도와 같은 경쟁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 선택권을 배제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교선택권이 배제되었다는 것은 결국 학원선택권만 남겨놓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좋은 학원을 보낼 수 있는 경제력 있는 사람에게 불평등한 혜택을 제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보수는 한국사회의 기득권체계에 진입한 세력의 기득권 지키기에 맞서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만들며 국가적 역동성 확립의 길을 열어야 한다.

한국 자유선택과 경쟁이 있는 곳에 번영이 있다. 잘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못사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잘사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어려운 사람들도 더 잘살게 된다는 것은 역사의 보편현상이다. 자유선택은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며 번영사회를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기반이다. 선택할 수 없는 나라에서 열심히 살려는 사람이 나올수 없고, 창의와 번영도 없다. 실제, 개인의 선택권이 배제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바로 국가주의나 전체주의의 길이다. 한국이 지향해온 자유는 결코 추상적, 명분적 자유가 결코 아니며, 그것은 지난 140년간 계속되어 온 것이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반봉건, 반식민, 반공산 투쟁의 피와 땀의 결과물일 뿐이다.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곧 반봉건, 반식민, 반공산의 투쟁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나라이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 V. 공정과 기회균등 가치와 정책지향

보수는 공정(fair)과 기회균등(equal opportunity)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공정하다(fair)는 것은 거의 정의롭다는 것과 같다. 자유와 공정은 동전의 양면이다. 진보좌파는 결과에 불만을 갖고 결과를 뒤집거나, 재조정하려 한다. 결과에 대한 인정보다는 결과를 부정하고 재편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보수는 결과는 당연히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대신, 경쟁의 공정성과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한다. 공정한 과정과 기회균등이야말로 보수가 포기하지 않고 지켜야할 가치이다. 그것이 성과와 업적에 따른 몫과 보상이란 공정사회의 정착이다.

참고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스포츠리그(예: MLB, 프리미어리그 등)의 시스템은 보수가 매우 준용하고 배워야 한다. 예를 들어, MLB는 Rookie-A-AA-AAA-Major 등의 리그로 나뉘어져있다. 거기에는 연봉 3천3백만달러(367억원) 선수에서부터 연봉 평균(A리그) 718만원도 안되는 선수들이 다 모여있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메이저리그로 갈수 있고, 누구든지 마이너, 혹은 A리그로 떨어지거나 방출되기 때문이다. 메이저리그에 한번 들어간 선수가 다시는 A 혹은 AA리그로 내려오지 않는 것이야말로 불공정한 것이고, A나 AA리그로 출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이다.

정책적 지향을 몇가지 거론한다면 그것은 성공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성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한국이 스펙사회가 된 것은 자격이 성공을 보증하는 구조가 여전히 살아 작동되기 때문이다. 보수는 성과와 업적사회를 만들 뿐, 좋은 대학을 나오고, 혹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성공한다는 신화는 빨리 깨져야 한다. 김밥집이나 만두집을 하든, TV프로그램을 만들든, 아니면 축구선수가 되든 남들로부터 많은 선택을 받는 사람이 성공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성과와 업적을 내지 못하면 하위리그로 가야하는 것이 명확해져야 하며, 그런 정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로 보수의 기회균등이고 공정이다.

30세이든 40세이든 좋지 않은 여건 때문에 혹은 시행착오 과정에서 뒤늦게 시작한 사람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창업하다 실패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왜, 중간에취직할수 없는가? 재도전의 일상화되고 평생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보수여야 한다. 한번 특정리그에 들어가면 평생 특정 리그에 남아야 하는 사회는 정의에 반하고 공정하지 않은 사회이다. 당연히 기회균등이 배제된 사회이다. 취직 준비생의 48%가 공무원 및 공공직 시험을 보는 사회가 된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한번 공무원이나 공공직에 진출하면 되면 60세까지 그 리그에서 계속 남을 수 있는 사회구조가 바로 한국사회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신분에 대한 변화없이 연공서열제와 호봉승급제는 성과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정의에도 반하는 것이다.

다른 예를 든다면 경직된 정년제 사회와 노동경직성이다. 한번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되면 35년간 공직을 유지할 수 있고, 한번 대기업으로 직원으로 시작하면 28년간 직원신분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그것은 직업이란 신분을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물론 승진과 보너스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한 경쟁이자, 그런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원천적 배제에 해당한다. 임용고시 합격하여 62세까지 교사신분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다른 분야의 전문가는 교사로 갈 수 있는 길이 봉쇄된 사회가 역동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산업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정년이 보장된 곳에 생산성과 창의성이 나올 수 없다. 그것은 노동력 투입시간과 생산결과가 비례하는 제2차 산업시대까지의

제도이다.

한국 보수는 자격과 신분을 취득해 평생을 보장받으려는 봉건적 사회시스템을 극복하고 국민에서 공정과 기회균등, 그리고 국민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공정과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할 보수는 봉건시대의 과거급제처럼 한번 신분을 취득하면 평생가는 불공정사회가 온존하지 못하도록 하고 백댄서들(back dancer)이 능력에 따라 항상 무대 중심에 설수 있는 기회, ‘장그래’가 능력과 업적에 따라 정규직이 되고, 승진하는 공정한 사회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 VI. 노력하는 사람을 위한 지원체계

보수의 복지(welfare)는 두가지로 집약되어야 한다, 첫째는 노력하며 살아 보려고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둘째는 스스로 설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수는 결코 노력없이 지원해달라며 떼쓰는 사람에게 힘겹게 일한 사람을 돕을 때어다 나눠주는 것은 결코 해야할 일이 아니다. 보수는 새벽까지 술먹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일어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 새벽까지 술먹는 사람을 위해 일하고 세금내지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아침부터 마음 졸이며 버스를 기다리고 ‘콩나물시루’같은 지하철과 만원 버스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출근하지 않고 상쾌하게 출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보수적 복지체계이다. 돈을 나눠주고 표를 얻는 것을 포기하고,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촘촘하게 하는 것이 더 복지확충이고, 특히 일하는 사람을 위한 생산적 복지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청년실업을 걱정한다며 취업 준비생에게 수당을 나눠주는 것은 청년을 더 안일하고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보수가 할 일이 아니다. 140만원 봉급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청년들이 대견한 것이지, 어떻게 220만원 이하 직장은 가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수당을 준다는 말인가? 전정으로 청년실업을 걱정하고 해소하고자 한다면 21살, 22살의 나이에 남루한 곳에서 만두집을 열고, 김밥집을 열어 창업을 하는 그 ‘아름다운 청년’을 돕는 것이 보수의 청년실업 대책이다. 학위 따기 위한 무의미한 대학에 가 4년을 허비하고 몇 천만원을 빚지고 시작하게 만드는 것은 청년을 돕는 것이 아니라 빚지우며

시작하라는 것일 뿐이다. 새벽부터 종이박스를 줍고 계단청소를 하는 아주머니를 돕는 것이 복지이지, 집에서 빈둥거리며 그 늙은 어머니에 의존하며 정부에 돈 내놓으라는 청년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보수는 일자리를 내놓으라는 청년을 보지 말고, 일을 시작하고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드는 청년을 아름답게 봐주고, 그를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달라고 떼쓰는 사람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 볼려고 아등바등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보수의 복지제도는 장애인이나 고아, 혹은 병자와 같이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소중히 하며 그분들을 위해 지원하는 체계를 정착시켜나가는 말이다. 쌀농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농업인을 지원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밀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이하의 소득이 일반화되는 업종 종사자들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 언발에 오줌눅기와 같은 대중요법이나, 목소리 높이는 집단에 표가 있다고 따라가는 것은 국민 지지도 못 얻고, 나라가 잘못된 길로 끌려 가는데 보수가 동조하는 것일 뿐이다.

## Ⅶ. 보수의 조직 및 실천과제

### 1. 활동력이란 가치 지향과 이념의 확고함에서 나온다.

알려진 바대로, 진보는 단호하게 ‘원칙’을 걷은 사람을 존중하고 지켜낸다. 그러나 보수는 좌-우합작하는 사람을 존중해왔다. 실제 그런 사람들이 화려하게 살며, 개혁적이란 평가를 달고 다닌다. 보수적 가치와 원칙을 걷는 사람은 ‘지나치다’ ‘경직되었다’고 배제되어왔다. 그에 따른 결과는 볼 필요도 없다. 전 사회의 진보좌파화다. 1980년대를 거치며 어떻게 대학사회와 언론계가 어떻게 진보좌파의 독점적 진지(陣地)가 되었는지를 다시 보면 쉽게 이해된다. 한국 보수는 진보에게 잘보인 사람을 우대한다. 좌우합작에 매우 능하고 좌우합작을 통해 생존하는 습관을 길들이게 만들어왔다. 보수가 정체성을 확립되고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진보좌파의 공격 타겟에서 벗어나 욕 안먹고, 힘들게 살지 않으려는 비굴함을 두고, 오히려 ‘합리적이다, 유연하다, 개혁적이다’라는 식의 허구적 평가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치 지향성과 사상의 명확성은 활동력과 정비례한다. 가치에 대한 확고함이 활동력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지향성이 명확하다면 사소한 작은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국가사회적인 큰 실수가 있을수 없다. 무작위적 1천 5백만을 염두해 둘 것이 아니라, 확고한 5만명을 만들어 그들이 1천 5백만 지지세력을 형성시키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가치지향이 없는 곳에서는 단지 잘보이려는 화장(化粧) 기술자들만이 들끓을 뿐이다. 공격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욕안먹고자 하는 사람이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은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시행과 결과를 보지도 않고, 결과를 판단하기도 전에 좌우합작적으로 가는 것은 보수의 길을 갔을 때 만들어지는 결과까지도 볼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시행착오와 경험축적으로 더 활동을 강화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 2. 보수는 지지 세력은 스스로 만들어 내야 한다.

보수는 지지세력을 스스로 만들지 않고, 만들어진 구도 속에서 중간자의 위치에서 선택받으면 된다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보수란 가치이고, 정책이고, 세력이기에 자신의 지지 세력은 자기가 만들어 내야 한다. 자기 지지 대중은 누구도 만들어주지 않는다. 기회주의적 편승의 자세를 중단해야 한다. 스스로 지지세력을 만들지 않는 습관과 게으름 때문에 다수 대중의 중간에 서면 지지를 받을 것이란 착각을 갖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수는 동과 면 단위에서부터 일상적 가치공유 및 실천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학습 및 교육조직이 살아 움직여야 한다. 가치를 공유하고 그 가치에 입각한 정책지향의 공감대 확산 및 조직 형성을 도모하는 조직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역에서 중앙까지 조찬모임, 포럼, 토론회, 강연회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 보수정당의 조직과 국회의원이 지역 대학이나 청년들에게 보수이념을 지향하는 단체하나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보수는 민주당, 정의당 등 좌파조직의 학습, 토론, 강연회 등에서 1/10도 못따라간다. 영 리퍼블리칸(Young Republican)이나 영 컨서버티브(Young Conservative)가 보이지 않는 한국 현실이다.

나아가 보수는 정부와 기업에 대한 의존을 끊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중립적 존재이고 또 중립적 활동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정부는 보수와 동일시되던 시기

는 이미 20년도 더 되었고, 1987년 체제로 끝났다. 정부에 의존하다보면 정부가 교체되는 순간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개념 휴업 상태가 된다. 정부와 기업에 의존해서 살겠다면 스스로 역사를 만드는 힘과 동력이 거세된 것이다. 보수는 정치 세력화를 지향하며 가치와 정책이라는 합의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보수는 각각의 영역에서 수 십년간 그 진지를 만드는 사람을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

정부에 의존함이 없이 사회적으로 각종 전문가 및 전문가그룹과 시민단체 혹은 뜻을 함께 하는 기업과 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에서 집권하지 않는 정당은 당조직과 싱크탱크 및 시민단체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물론 한국 진보좌파도 마찬가지다. 민노총과 전교조는 물론이고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 혹은 각종 환경 및 '평화'단체에서 보듯 한국 진보도 거의 동일하다. 보수가치에 충실하고 전념하는 정치세력 및 시민단체와 싱크탱크단의 조직화가 필수불가피하고, 이를 통해 일상적인 보수가치의 확산과 대표성 체계를 만들어내야 한다. 편승과 무임승차는 보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가치가 열어야 할 대한민국 미래의 쇠락이기 때문이다.

### 3. 권위와 연고구조를 극복하고 국가적 네트워크를 가동해야 한다.

보수는 직위가 결정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직위가 결정짓는 위계구조는 대안을 찾기 어렵고 활동력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열린 구조와 합리적 의견수렴이 아닌 윗사람에 의한 권위적 결정이 관례와 된 것이 보수의 업무구조다. 공무원, 군, 교수사회의 관례가 보수조직으로 이전되었는지, 보수조직의 토론이나 회의도 늘 윗사람 중심 구조로 종결된다. 보수의 활력은 윗사람의 논리에 지배되지 않고 공적인 지배구조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더 높은 직위가 결정하는 보수정치 한계가 명확하다.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조직이자, '눈치'보면 되는 업무구조, 윗사람에게 잘보이면 되는 보수조직을 만들기 때문이다.

보수조직이 역동성을 상실한 가장 원인의 하나는 역할과 성과에 따른 댓가와 인정이 따르지 않는 것과 사무정책직에서부터 공직 공천에 이르기까지 층원구조에 연고주의가 작동되기 때문이다. 연고(緣故)작동의 정점에 당(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있다. 연고주의가 작동되는 곳에서는 수년, 수십년간 가치중심적 활동을



할 이유가 없다. 특히, 보수정당에 몸담은 분들을 지켜보면 다들 심혈을 기울여 연고중심 조직은 열심히 만들면서도 이념과 정책조직을 만드는 분을 거의 보지 못했다. 심지어 만들 필요도 못 느끼는 사람도 많다. 힘든 노력과 업적 쌓기 보다는, 사적 연고(緣故)가 얼마나 결정적으로 작동되는 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정당은 가치활동 조직인데 보수정당에 있던 몸담았던 대부분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는 곳은 보수활동과 먼 생업으로 가게된다. 그런 방식으로는 전문성이 누적되고 연계된 확대적 활동으로 나타나기 어렵다. 투쟁력과 활동력의 발휘도 불가능하다. 당 공천구조에서부터, 혹은 전직 대통령들에서부터 우리가 알고있는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이다. 결국 보수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한두번 시도해보아야 결론은 뻔하다. 다시 직장인으로 돌아가야 한다. 채용구조가 가치와 조직활동의 결과가 아닌 친구-친척 추천이나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쓰는 구조이다. 활동과 업적중심으로 평가될 수 없는 조직이다. 당연히, 보수가치를 중심으로 연계된 전국 네트워크(National Network)도 없다. 물론 누가 어디에서, 어떤 헌신적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관심도 없다. 그러니 전문성 제고나 활동은 없고 '높은' 사람과의 '연고 만들기'에 집중되게 마련이다. 한국의 보수는 하루빨리 연고중심주의가 작동되는 전근대적 현실을 극복하고 전국적 보수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가동시켜야 한다.



보수가치 재정립 연속토론회 I  
보수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 토론

강규형 명지대학교 교수  
김인영 한림대학교 교수  
권순활 동아일보 前논설위원



## 한국의 우파는 보수가 아니고 한국의 좌파는 진보가 아니다

강규형 (명지대학교 교수)

한국 우파엔 보수주의자가 지녀야 할 품위 있는 철학이 없다. 그 대신 개화파의 DNA를 이어받아 대외 지향적이었고 엄청나게 빠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낸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집단이었다. 반면 한국 좌파의 뿌리는 위정척사(衛正斥邪)의 수구파였기에 반(反)국제주의를 표방했다. 그래서 퇴행적이고 폐쇄적인 모습을 자주 띠었다. 그러나 그들은 폐쇄적 민족주의와 대중영합주의라는 강력한 무기를 결합시켜 사회 내의 진지들을 견고하게 구축했다. 10여 년 전 대선에서 참패한 좌파 친노 세력이 자신을 폐족(廢族)이라 지칭할 정도로 무너졌지만 지금은 화려하게 부활했다. 미래는 알 수 없고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는 게 한국 정치이지만 한국 우파는 재기가 의심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그들은 산업화를 이뤄놓고 나서 대안을 내놓는 데 안이했다. “잘살아보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별로 없다. 정치 세력으로서 우파에게 제일 큰 관심은 자신들의 재선(再選)과 권력 유지인 듯도 보인다. 대중영합주의에 결연히 맞서 싸운 마거릿 대처의 결단력과 철학도 없다. 데이비드 캐머런의 유연성도 없다. 캐머런은 영국 노동당이 블레어리즘이란 ‘제3의 길’로 새 모습을 보이고 집권하자, 변화한 노동당의 장점을 흡수하며 “따듯한 보수” “큰 사회 (Big Society)”를 기치로 변신해 보수당 집권에 성공했다. 그동안 한국 우파엔 위기 때마다 대개 좌파 운동권 출신 인재들이 혜성처럼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일정 역할을 한 이후 사라지는 일회성이어서 지속성이 미약했다. 요즘 우파 지식인 사회와 시민단체에서 내놓는 여러 담론을 보면 ‘한국자유회의’를 제외하고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인재의 중요함도 모르고 사람을 끌어다 소모품으로 쓰기에 바빴고 새로운 리더군(群)을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 김부겸·김영춘과 같은 여권의 차세대 리더들, 그리고 손학규 같은 현재 리더가 현 야당 전신인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것은 시사하

는 바가 크다. 게다가 우파 정치권은 김문수 같은 내부 자원도 제대로 활용할 줄 몰랐다.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우파 정당인 리쿠드당의 새 지도자 육성법은 교훈이 될 법하다. 이츠하크 샤미르 전 총리와 같은 리쿠드당 리더들은 기존의 노쇠한 지도자로는 노동당의 시몬 페레스에게 대적하기에 역부족임을 실감했다. 그래서 유엔 주재 대사 경력밖에 없는 젊디젊은 베냐민 네타냐후를 발탁해서 차세대 지도자로 키웠다. 결국 네타냐후는 1996년 46세 때 총득표 1% 차로 페레스를 제치며 이스라엘 역사상 최연소이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첫 총리로 등극했다. 그는 현재 67세 나이로 두 번째 임기 이스라엘 총리로 재직하고 있다. 지도자감 젊은이를 과감히 발탁해 최고 지도자로 키워낸 것이다.

한국 우파 정치권에 필요한 것은 이런 비전과 과감함이다. 불행히도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듯하다. 도지사 시절부터 합리적인 우파정책을 독심있게 펼쳤던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되면서 그나마 득표율 24%를 얻고 안철수 후보를 제치는 '실버크로스'가 가능했다. 그는 패기있고 이념적으로 준비된 후보였다. 다른 후보가 나왔으면 20% 미만 3등에 머물렀을 것이다. 하지만 홍 후보가 스스로 잘 표현한 대로 구여권의 대선 후보는 '초상집 상주' 역할밖에 할 수 없었다. 그나마 그 역할을 잘 수행했다. 그런 그에게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는 것은 한심한 처사이다. 그러나 그도 이제 젊지 않은 나이이다. 그에게 씌워진 거친 독불장군 이미지는 파이터로서는 유효했으나 망가진 당을 추스르고 이끌어갈 리더십이란 점에서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젊은 세대는 이제 강골검사·모래시계 검사 홍준표의 활약상에 대해선 거의 모른다. 확실한 사실은 한국당은 이제 당권에 연연할 때가 아니고 새로운 지도자군을 키워야 할 때라는 것이다.

한국 우파에 유리한 사실은 세계사의 조류가 우군(友軍)이라는 것밖에 없다. 한반도에서 냉전과 끔찍한 공산 전체주의를 종식하고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여기에 역행하는 친북·종북세력과 다수 국사학계는 급속하게 역사의 유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 믿으며 사는 것은 감 떨어질 날을 기다리며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좌파의 '헛발질'에 편승해서 이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현 정권이 우파의 자멸로 집권했기에 그 전에 자기 혁신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외생적인 충격이 새로운 동력을 마련해줄지 몰라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선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잘 활

용하기 어렵다. 자기 힘으로 새로운 동력을 얻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속히 젊고 유능한 지도자들을 키워야 한다. 그 과정은 예상보다 어려울 것이며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보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 보수 패배주의 극복과 진지전 전략 -

김 인 영 (한림대학교 교수)

### I. 프랑스 사회당과 자유한국당 몰락의 유사성

박지향 교수님, 김주성 교수님, 김광동 원장님의 발제는 현재 한국 보수가 처한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다루고 있다. 보수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장기 진지전이라는 미래를 준비하는 보수정치 세력이 새겨들어야 할 적절한 분석이다.

본인은 영국 보수당의 능동적 변신이 권력 유지의 중요한 요인임을 인정하면서도 현시점에서 본다면 현재 프랑스 사회당(Parti Socialiste)의 몰락이 도리어 자유한국당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보여 진다.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 당시 집권했던 중도좌파 사회당은 지난 4월 대선에서 브누아 아몽 후보를 내세워 “역사적 대패”를 당했고, 이번 총선에서는 기존 200여석에서 29석으로 몰락했다. 프랑스 사회당의 대선·총선 패배와 몰락에 대한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지만 사회당이 중도 좌파(중도 급진)를 표방했음에서 그리고 올랑드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당내 분열을 수습하지 못하고 헤맨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정치 구심점이 없이 해매자 사회당 내 좌파는 더 선명한 좌파 정책을 표방한 앙수미즈로, 중도 사회당 지지층은 앙마르슈로 옮겨가게 되었다. 정당 내분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동시에 경제 정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더구나 미래를 담보하는 정치 리더십조차 보이지 않자 지지층이 등을 돌려 몰락한 것이다.

이러한 프랑스 사회당의 모습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공천 싸움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이후 내분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친박’과 ‘비박’이 당권 싸움으로 해매다가 최순실 국정농단을 막아내지 못하고 국민에게 버림받고, 새누리당과 청와대 내 정치 리더십 부재 상태에서 분당과 대선 패배를 연이어 맞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모습과 오버랩 된다.



## II. '보수'와 '진보'의 구분

'보수'의 위기를 논하기 전에 우선 '보수'가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수'는 '보수' 혼자서만 존재할 수 없고 항상 '진보'와 대응으로 존재하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보수', '진보'의 차이가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개인의 사고와 태도의 상이함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적 사고', '진보적 사고', '보수적 태도', '진보적 태도'라는 용어가 옳은 사용법이다. 나아가 '보수', '진보' 그 자체로는 거대한 사상적 체계 또는 이념 체계를 가진 것은 아니고 단지 '보수의 가치'(conservative values)와 '진보의 가치'(progressive values) 정도를 규정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통용되는 '보수'와 '진보'의 구별은 “어느 사회의 기존 가치와 규범, 즉 전통과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변혁을 주장하는 측은 '진보'이고 전통과 법과 제도의 안정을 유지·보존하면서 개혁과 개량을 해나가자는 측은 '보수'이다.”(이완범, 2013, 89) 그렇다면 '보수'는 개혁과 개량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수구'와 다르다.

예를 들어, 보수주의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는 휘그파의 자유주의자로서 토리당의 언론탄압에 적극 항의했고,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영국의 식민정책을 비난하며 아메리카 식민지 독립을 지지했으며, 아일랜드 신교도이면서도 아일랜드 가톨릭교도들에 대한 평등한 시민권을 주장했고, 노예무역과 노예제도의 폐지를 찬성했다.(노명식, 2011, 219) 보수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가져올 결과가 퇴보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변화에 신중하자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보수'를 의도적으로 폄훼하려는 세력들이 '보수'를 '수구(꼴통)'와 동일시하는 것은 옳은 용어 사용법이 아니다.

유럽의 역사 속에서 '진보', '보수'는 자유와 평등에 대한 견해 차이로 구별되어 왔다.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자들은 진보, 자유를 주장하는 시장주의자들은 보수로 분류”(남시욱, 2008, 3; 이완범, 2013, 89) 해왔다. 단순하게 정의하면 자유를 평등보다 강조하면 '보수', 자유보다 평등을 중시하는 사고를 '진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자유’와 ‘평등’이 ‘보수’, ‘진보’의 용어 구분의 척도가 되었던 유럽의 역사와 달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는 ‘북한에 대한 견해 차이’가 ‘보수’와 ‘진보’의 구분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최근까지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은 북한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세력으로 인식하면 ‘진보’, 대화와 협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전체주의 세력으로 인식하면 보수로 분류해 왔다. 때문에 일부 소위 ‘진보’세력의 태도, 즉 세계의 인권이나 여성인권의 향상에 대하여는 주창활동을 하면서 북한인권에 대하여는 침묵하는 모순이 설명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정당 내에서의 정치적 파벌, 즉 정파와 그 추종자들을 지칭하는 말인 ‘친박’, ‘친이’, ‘친노’, ‘친문’을 하나의 이념이나 사고방식, 또는 정치적 태도로 묶을 수 없다. ‘친박’ ≡ 보수, ‘친이’ ≡ 보수, ‘친문’ ≡ 진보라고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친박’을 ‘보수’라고 정의(‘친박’ ≠ ‘보수’)할 수 없다면 ‘보수세력’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자유한국당이 나아갈 길은 명확해진다. 즉, 자유한국당의 보수정당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서 당내의 ‘친박’, ‘친이’, ‘친홍’ 등 파벌과 내분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 보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내에서 정책적 차이는 존재할 수 있지만 정치적(분파적) 파벌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는 개개인의 사고와 태도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수’, ‘진보’ 어느 한 편도 완전히 궤멸되어 사라진 적은 없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진보’의 정권 장악 성공으로 보수 세력이 궤멸되어 없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정치사든 유럽의 정치사든 보수가 완전히 궤멸되어 사라진 적은 없음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역사에서 보수의 역사적 유산(legacy)이 면면히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는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낸 주도세력이며, 산업화를 이끌어 성공시켰고, 진보가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민주화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만들어준 세력이라는 ‘진보’가 아무리 ‘보수’의 산업화 성공을 깎아내린다고 하더라도 산업화로 만들어진 중산층이 없었다면, 즉 중산층의 지지와 ‘넥타이 부대’의 주도적 협력이 없었다면 ‘6·10 민주화 항쟁’ 나아가 한국의 민주화가 성공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진보가 주장하는 반독재 투쟁의 성공이 보수의 산업화로 만들어진 중산층의 지지가 절대적 요인이었다라고 함은 한국사회를 지탱하는 힘으

로서의 보수의 의미를 되새겨 준다.

결국 장기적으로 본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국민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문재인 정권이 실수를 거듭하게 되면 ‘보수’는 다시 살아날 것이 명백하다. 물론 피나는 보수 개혁과 운동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사회 전체에 퍼져있는 ‘보수궤멸론’과 보수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보수 패배주의 역시 극복해야할 대상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언론과 지식인층에 퍼진 보수 패배주의다. 최근 평론가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 안팎에 이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0% 안팎에 그치는 점을 지적하며 보수의 부활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1993년 군부정권과 평생을 싸워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의 신화를 능가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대다수 여론조사 기관이 진보 편향성을 가진 점, 최순실 국정농단이 밝혀진 이후 대선기간 그리고 지금까지도 보수층이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응답 표본(sample)의 편향성이 상당히 의심된다. 특히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는 친문 지지자들의 높은 응답으로 왜곡되었었고, 이는 지난 번 대선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는 보수붕괴론에서 진보 (장기) 대세론으로 그리고 보수패배주의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에 대한 낮은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신뢰할만하다고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어떠한 정권도 2년 이상 높은 초반 지지율을 지속하지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보수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 한 자신들에 대한 지지율 역시 상승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의 실수와 실패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정권 재창출의 성공을 위해서 해야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부연하면 보수를 살리는 길에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야 하고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의 리셋 또는 재부팅 이후 보다 튼튼한 보수 재정립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해야할 일(must do, 운동)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Ⅲ. 보수패배주의를 넘어 보수 재정립을 위하여

보수 재정립을 위해서는 “보수정당은 보수가 어떠한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 아는가, 그 가치를 대변해왔는가,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는 지식인 운동, 풀뿌리 운동이 있었나?”라는 질문해야 한다. 그 답은 보수는 사상의 빈곤, 정책의 빈곤, (풀뿌리) 시민운동의 빈곤이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현실 인식이다. 이의 극복을 위해 다음의 3가지 보수행동(the Conservative's Action)을 제안한다.

첫째, 자유한국당이 지역주의에 기댄 정치세력이 아니라 보수를 대변하는 정통 보수 세력이 되고자 한다면 자체적으로 보수주의(conservatism)와 보수의 가치(conservative values)를 학습하고 토론하고 그를 기초로 정책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시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sup>1)</sup> 특히 ‘보수’를 표방했지만 무엇을 보수·유지하느냐는 보수의 목표(conservative aims)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다. 보수정당이 보수의 철학과 보수의 정책을 명확히 해야 지지층이 생겨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자유한국당은 과거 새누리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보수 정책을 만들어 제시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이 만들어낸 경제민주화 정책이나 복지 정책을 따라 가기 분주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자신의 정체성(identity)은 잊고 남을 모방하기에 급급하다면 그런 정당은 존재할 이유(raison d'être)가 없다.

둘째,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수 지식인들은 ‘뉴라이트(New Right) 운동’의 재발진을 시작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004년부터 ‘뉴라이트’라는 새로운 보수 지식인 운동이 출현했듯이 2017년 노무현 정부 2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기에 새로운 ‘뉴라이트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친북 진보(좌파) 세력의 장기집권 전략에 대비한 진지전(war of position) 구축의 의미와 함께 보수 재집권을 위한 사상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다. 보수철학과 보수적 가치를 정립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주도적 역할을 보수 지식인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 보수주의를 공부하고 토론하고 정책을 만드는 중심에는 여의도연구원이 있어야 하고 여의도연구원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을 지향하는 정당의 정책 연구소 명칭에 ‘여의도’는 적절하지 않다. 새롭게 태어나는 연구소는 자유대한민국의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연구하고 그에 기반을 둔 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궁극적인 지향점은 법치와 작은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뉴라이트 운동’은 2004년 11월 23일 ‘자유주의연대’를 창립하였고, 2005년 1월에는 ‘교과서포럼’, 3월에는 ‘뉴라이트 싱크넷’, 10월에는 ‘뉴라이트 네트워크’, 11월에는 ‘뉴라이트 전국연합’, 2006년 1월에는 ‘뉴라이트 교사연합’, 4월에는 ‘뉴라이트 문화체육연합’과 ‘뉴라이트재단’, 6월에는 ‘기독교 뉴라이트’를 창립했다.(강정인, 2013, 171) 이후 기독교 진영에서는 ‘기독교 사회책임’,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만들어졌고 이는 학계, 종교계, 교육계, 문화계로 퍼져나갔다. 소위 뉴라이트 진영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운동의 보도를 위해 ‘업코리아’와 ‘데일리안’ 등의 인터넷 신문이 만들어졌다.(강정인, 2013, 171) 이러한 ‘뉴라이트 운동’의 재현 내지는 재발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의 ‘티파티 운동’(Tea Party Movement)과 같은 보수주의 풀뿌리 시민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이는 복거일 평론가가 강하게 제시한 방안이기도 하지만, 그 근본은 위의 정당과 지식인 운동이 지속할 수 있는 풀뿌리 기반의 제공에 있다.(복거일, 2017) 달리 말하면 위의 ‘뉴라이트 운동’이 역사에서 사라진 이유가 그 기반이 되는 풀뿌리 시민운동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보수주의 운동인 ‘티파티 운동’은 그 자체로는 성공할 수 없고 지식인 운동과 정치인의 개혁운동이 함께 할 때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위의 세 차원의 문화·철학운동은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서로 돕고 또 사상적으로 정책적으로 운동의 방식에서 서로 공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수운동이 주의해야 할 것은 전통적인 반공세력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다. 한마디로 보수주의 운동은 ‘안보’를 중요시 하더라도 그 지향하는 가치가 ‘반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반공’에 머무른다면 수세적인 또는 수구적인 색채를 띠 수밖에 없고, 김주성 교수님이 설명한 ‘반공 권위주의’와 ‘발전 권위주의’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반공에 치중한다면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운동이 아니라 단지 진보(좌파)에 반대하고자 하는 하기 쉬운 시민운동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이다.

보수주의 운동은 무엇이 반대하는 운동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와 자유시장(free market)이라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자기 정립과 주창 운동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단기적 목표인 정권 재탈환과 장기적 목표인 진정한 보수 세력 재정립이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정인. “개혁적 민주 정부 출범 이후(1998~) 한국의 보수주의: 보수주의의 자기 쇄신?”. 양승태 편. 『보수주의와 보수의 정치철학』. 서울: 이학사. 2013.
- 남시욱. “한국 보수 세력의 형성 과정과 당면 과제.” 한반도선진화재단 보수 주례 세미나 2차. 『보수를 말한다』. 2008년 10월 24일.
- 노명식. 『자유주의의 역사』. 서울: 책과함께. 2011.
- 복거일. “난세가 부르는 인물: 대한민국 지키려는 열정 보여준 태극기 집회, 대선 패배 후 '티파티'로 생기 찾은 미국 공화당처럼 자유민주·시장경제 위한 풀뿌리운동 시작해야.” 『한국경제신문』. 2017년 5월 21일.
- 이완범. “한국 보수 세력의 계보와 역사.” 양승태 편. 『보수주의와 보수의 정치철학』. 서울: 이학사. 2013.

## 짜퉁 보수우파에는 미래없다

권순활 (동아일보 前논설위원)

최근 세계적으로 좌파의 퇴조가 두드러지고 있다. 과거 공산주의 양대 종주국이었던 러시아와 중국은 자본주의적 요소를 대거 도입해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서방세계의 이념적 지형을 살펴봐도 사정은 그리 다르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終戰) 후 일본 정치의 보혁(保革) 구도에서 보수 성향 자민당에 맞서 이른바 ‘좌파 혁신세력’을 대표했던 사회당(현 사민당)은 이미 미미한 존재로 전락했다. 현재 일본의 제1 야당인 민진당(옛 민주당)은 이념적 성향에서 중도 우파 성격이 짙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던 프랑스 사회당도 최근 총선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의 참패를 맞았다. 미국의 민주당, 영국의 노동당, 독일의 사민당도 전통적 의미의 좌파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이런 흐름은 좌파적 가치로는 국가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향상도, 자국 국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도 어렵다는 각성에 따른 것일 것이다. 이런 범세계적 흐름과 달리 한국은 정치 교육 법조 언론 노동 등 사회의 거의 전 분야에서 좌파 또는 준좌파가 갈수록 득세하고 우파가 퇴조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우파와 좌파를 보수와 진보라고 표현하는 풍조가 짙어졌다. 그러나 이런 보수-진보 구분법이 과연 옳고 정확한지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서구 사상사에서 ‘역사의 진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였다.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인류의 무한한 발전을 낙관했지만 정작 본인은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희생된 프랑스 철학자 콩드르세는 “완전함을 향한 진보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지구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계몽주의의 산물인 ‘역사의 진보’라는 개념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공산주의로의 이행과 동일시함으로써 ‘도덕적 고지’를 선점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좌파가 진보라는 견해는 지구촌에서 힘을 잃은 지 오래다. 1990년 전후

옛 소련의 붕괴 과정에서 서구식 체제로의 변화를 열망하던 목소리가 진보와 개혁이었고 기존의 소련 공산당 체제를 고수하던 움직임이 보수나 수구였다. 1976년 마오쩌둥 사망을 전후해 벌어진 중국의 권력투쟁에서도 문화혁명식 극좌 노선을 고집한 4인방 세력이 보수였고 상대적으로 시장경제 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하려던 덩샤오핑 세력이 진보로 불렸다. 유럽이나 남미의 선거 결과를 보도하는 외신 기사들의 원문을 살펴봐도 대부분 우파와 좌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보수와 진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복거일 선생은 2005년 저서 ‘조심스러운 낙관’에서 “누구에게나 진보라는 말이 보수라는 말보다 훨씬 좋게 들리는 현실에서 우리 체제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보수, 그것을 허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을 진보라고 부르는 관행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전통적인 구분인 우파와 좌파, 또는 친체제와 반체제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어느 젊은 우파 여성은 자신의 페이스북 소개글에 “‘진보’라는 말에 유감이 많다. 인간은 누구나 진보를 지향하고 청년은 더욱 그렇다. 그런데 대한민국 우파는 이 말을 좌파에 빼앗김으로서 청년들을 설득하는데 열세인 상황에 놓였다”고 썼다. 굳이 우파를 보수라고 한다면, 좌파는 진보 세력 대신 1980년대 한국의 운동권 진영에서 자주 사용했던 ‘변혁 세력’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 정명(正名)의 원칙은 이념의 영역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 이념 지형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를 지탱하는 핵심 공권력인 검찰 경찰 법원 등에서는 좌파에는 관대하고 우파에는 혹독한 결정이나 판결이 내려지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신문 방송 포털 등 넓은 의미의 언론 지형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에는 우파 매체와 좌파 매체가 어느 정도의 균형을 잡고 상호 견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적어도 지난 1년 여간 메이저, 마이너 가릴 것 없이 쏟아진 수많은 오보와 과장, 선동, 엘로우 저널리즘은 선진국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언론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만큼 심각한 집단적 ‘저급 찌라시 수준’이란 비판이 적지 않다. 많은 국민을 오도한 저질 보도가 난무했지만 지금까지 어느 언론사에서도 제대로 된 자성도, 사과도, 책임지는 모습도 찾기 어려웠다는 것은 더 큰 비극일 것이다.

정치권은 또 어땠나. 현 집권당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보수정당을 자임해온 옛 새누리당은 서구적 의미의 엄밀한 기준에서 보면 우파 정당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새누리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회의적이다. 본 토론자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왜곡된 낙인찍기와 마녀사냥이 기승을 부린 직후인 2014년 7월 ‘새누리식 기회주의의 치명적 한계’라는 칼럼에서 당시 새누리당을 ‘확고한 가치관도, 진실에 대한 존중도, 거짓에 대한 항전의지도 없이 금배지의 단물에만 익숙한 웰빙 기회주의 체질’이란 표현으로 비판했다. 가치와 대의(大義)의 깃발 아래 싸울 수 있는 구성원이 적은 조직은 결정적 위기가 오면 오합지졸의 집단으로 전락한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그 이후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어떤 길을 걸어와 어떻게 추락했는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시민사회 운동과 관련해서도 좌파가 비단길, 또는 출셋길이라면 우파는 돌밭길이나 가시밭길에 비유할 수 있다. 연세대 류석춘 교수는 2006년 내놓은 ‘참여연대 보고서’에서 대표적인 좌파 성향 사회단체인 참여연대 임원의 36.1%인 150명이 청와대와 행정부, 각종 정부기관 등의 313개 요직에 진출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발표된 인사에서도 각종 좌파 단체에서 활동한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좌파 성향 인사들이 이끄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역시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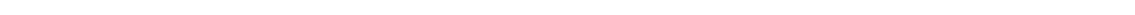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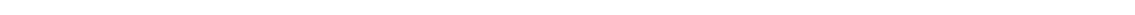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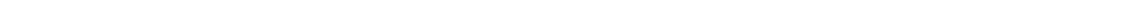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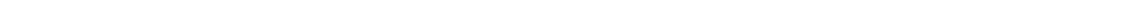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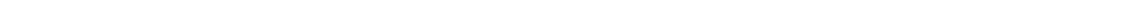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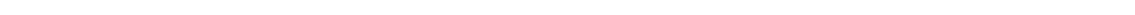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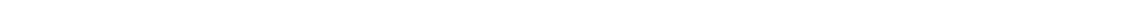
반면 우파운동 활동가나 지식인들은 좌파 정권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보수우파정권이라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찬밥 신세였다. 어쩌다 발탁된 인사들도 일부 세력의 왜곡된 ‘극우 낙인찍기’와 전방위적 공세에 시달리기 일쑤였고 새누리당은 이런 공세에 정면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전긍긍하면서 부화뇌동하는 모습까지 심심찮게 보였다. 웬만하면 한국에서는 가치와 이념의 문제는 제쳐놓고라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우파 운동보다는 좌파 운동을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오겠는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와 군사 환경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가 증대한 기로에 직면해 ‘국운의 추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한국적 상황에서 대한민국 건국과 경제적 성공신화를 주도한 보수, 또는 우파의 몰락은 자칫하면 대한민국 공동체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위험성도 적지 않다.

보수우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식인과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민간의 활력과 사유재산권 존중을 중시하는 우파적 가치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우파 정치권은 무엇보다 웰빙 기회주의 체질이나 개인적 친소 관계에 따른 패거리 정치에서 벗어나 지켜야 할 대한민국적 가치와 이념으로 무장한 집단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세계적 조류에 역행해 좌파, 또는 범좌파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진 한국적 현실에서 가치와 철학은 뒷전이고 머리를 굴려가며 자신의 잇속과 자리만 따지는 웰빙 정치인보다 헌법적 대의와 국가 정체성 수호를 위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는 강단 있는 우파 정치인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야 한다. 기존의 몰이념적 체질을 탈피하지 못하거나 한 술 더 떠 정책과 세계관에서 ‘좌파 2중대 정당’으로 전략한다면 잠재적 지지층의 이탈마저 가속화해 처절하게 몰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위에서 정상적인 경쟁이 불가능한 장애인이나 빈곤층 청소년과 노인층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따듯하게 보듬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 ‘보수우파는 차갑다’는 우리 사회 일각의 오해를 푸는 노력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 MEMO





# MEMO

